

경기도, 추석 앞두고 노동자 임금체불 지원 나선다

✎ 박건 기자 | ⓒ 승인 2022.08.30 10:09

어려움 겪는 노동자에 '무료노동상담' 지원
철도건설 현장 임금 체불·안전 관리 등 특별점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도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무료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료 노동상담’ 프로그램은 ‘민생 회복’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발맞춰, 임금체불 등 생활과 밀접한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무료 노동상담’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총 2회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북부권역 상담은 오는 9월 1~2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진행되며, 경기 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한다.

남부권역은 9월 5~6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원역에서 수원시,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센터 소속 노무사와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함께한 가운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용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상담 방법은 센터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 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하도급·노임·장비 대금 지급 등 체불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나선다.

도는 오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7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비 종합점검을 벌인다.

이를 위해 7개 점검반을 구성, 건설노동자 노임 및 장비 대금 지급실태, 화재 취약 시설은 물론, 연휴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태풍 등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체불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방침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thereport.co.kr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